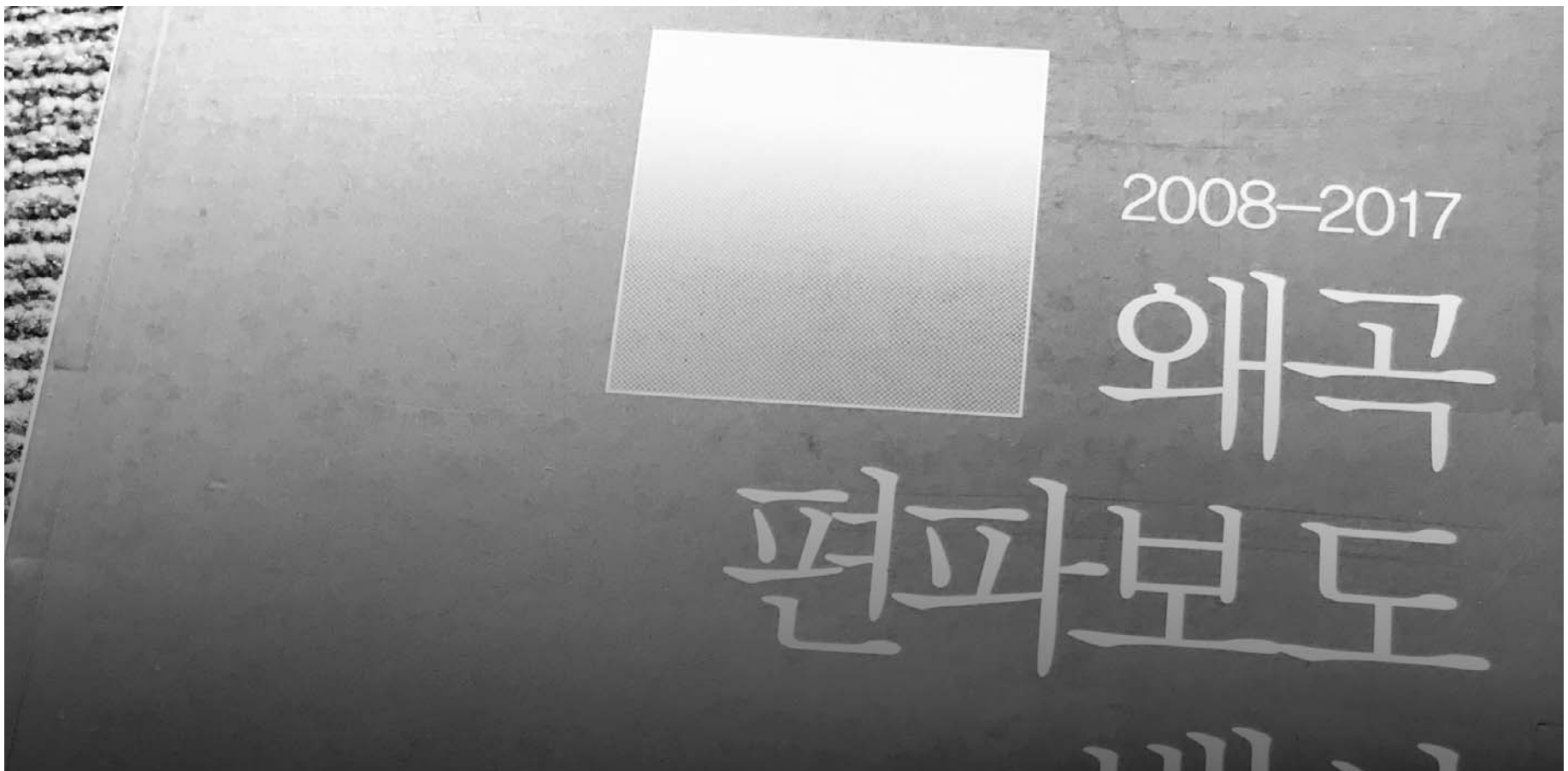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문화방송노보

무단협 1832일째
지명파업 659일째

236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김시이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8년 1월 22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 정상화위원회〉 공식 출범

권력의 방송장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작된다

'공영방송 MBC 장악'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MBC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설치된 공식 기구이다.

위원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난 9년 간 MBC에서 벌어진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 침해, 공정방송 파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둘째,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방지 대책을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문화방송 사용자 측과 소속 노동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각각 2인 씩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된다. 사측 위원은 정형일 보도본부장과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노측 위원은 김철영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과 조소형 경영부문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공동위원장은 정형일 본부장과 김철영 부위원장이다. 산하에 조사 실무 부서와 조사 전담 인력(조사역)을 두고, 앞으로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9년 간의 방송 장악을 총파업 투쟁으로 종결시키고 국민의 방송으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상징이다. 폐허가 된 MBC의 재건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2017년 노동조합의 72일 총파업의 정신이자, 최승호 사장의 공약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재건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작된다. 〈관련기사 뒷면〉

진상 규명과 과거 청산은 MBC 재건의 전제조건

■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권한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 1조는 그 목적을 "과거 문화방송에서 벌어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침해, 공영방송 가치 훼손의 배경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으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모든 것>이다. 2008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벌어진 ①방송의 독립성 침해 ②사실의 은폐·왜곡 ②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청탁 ③방송 강령, 윤리강령 ,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같은 사규 위반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교과서 문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 보도 등에서 자행된 심각한 편파 왜곡 보도, 검열과 보도 통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MBC 총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뤄진 불법 대량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 노동조합 탈퇴 강요 및 조합원 불이익 처분, 구성원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대체인력 채용 등 공정방송 파괴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등 전직 사장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김재철 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고 편성은 물론 라디오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 출연자 선정까지 개입한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광한, 김장겸 등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이들의 지시를 받아 권력의 MBC 장악, 방송 독립, 공정방송 파괴에 협력한 MBC 간부와 실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반복적으로 편파 왜곡 보도에 가담한 제작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MBC 파괴 사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근거 문서나 영상물 등 증거자료를 요구·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한다. 채택된 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 권한을 갖는다.

첫째, 공정방송 파괴 책임자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공정방송 파괴 행위를 은폐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조사 결과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셋째,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규 개정, 제도 보완 등의 조치를 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청산'과 '재건'은 모든 MBC 구성원들의 바람이자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노동조합은 정상화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MBC 정상화위원회〉 개요

위원회 구성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 4명 (노사 공동위원장 2명) ▶위원회 산하 실무부서 설치 - 조사역(조사전담인력) 및 자문위원
조사 대상과 범위	2008년 2월~2017년 11월 ①방송의 독립성 침해 ②사실의 은폐·왜곡 ②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청탁 ③방송 강령, 윤리강령 ,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등 사규 위반 행위 ⑤위 ①~④에 대한 은폐행위 ⑥기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예] ①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교과서 문제, 대통령 선거 등에서 자행된 심각한 편파 왜곡 보도, 검열과 보도 통제 사건 ② 불법 대량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 노동조합 탈퇴 강요 및 조합원 불이익 처분, 구성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대체인력 고용 등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 사건 ③ 조직개편, 인사발령, 인사평가, 채용 등 공정방송 실현에 영향을 준 회사의 각종 조치와 제도 실행
조사 이후 조치	① 책임자 징계 요구 ②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조치 권고 ③ 재발 방지책과 제도적 보완 등 권고
활동 기간	1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뉴스 혁신, 실험할 자유로부터

뉴스, 과연 달라졌나?

1월 16일 <뉴스데스크>에는 스포츠 뉴스 전까지 19개의 리포트와 스튜디오 기자 출연이 방송됐다. 블록체인을 다룬 2분 30초 리포트와 출연, 그리고 유선전화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한 2분 길이의 리포트를 빼면 대부분 1분 30초 내외의 리포트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관제 시위, 남북 대화, 블록체인, 최저임금 관련 기사들이 '블록 편집'으로 나갔다.

6개월 전인 7월 17일 <뉴스데스크>로 돌아가보자. 스포츠 뉴스 전까지 24개의 리포트가 방송됐다. '집중' 타이틀과 '뉴스플러스' 타이틀이 붙은 2분 30초 리포트 2개를 빼면 역시 대부분 1분 30초 내외의 리포트이다. 중부지방 폭우, 남북 대화, 최저 임금 관련 기사들이 '블록 편집'으로 나갔다.

선택한 아이템의 성격이나 논조는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은 피할 수 없다.

총파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 11월, 보도부문 구성원 130명이 뉴스 재건에 관한 설문에 응했고,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다. 30명 이상 가장 많이 나온 제안은 <뉴스데스크>가 1분 30초 리포트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뉴스'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자는 취지이다. 많은 기자들이 원하고있다.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여전히 불친절한 뉴스, 지금 형식으로 극복 가능한가?

최근 <뉴스데스크>가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의혹 중 하나인 '다스'이다. 2007년 대선의 뜨거운 감자였지만 이명박 집권 후 이 이슈는 묻혀졌다. 다스 전담팀이 구성된 12월 22일부터 최근인 1월 16일까지 <뉴스데스크>는 19차례 리포트를 했다. 일련의 기사는 다스의 실소유주 진실을 향해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다.

2017년	'다스' 주인 찾는다 전담 수사팀 구성
12월 22일	MB 의혹 이번에는 풀리나
12월 23일	MB 압박 두 갈래 수사
12월 24일	"권력 개입 명확…증거 있다"
12월 26일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
12월 28일	다스 전 직원 "MB가 주인"
12월 30일	다스 전 운전기사 "특검에서 거짓 진술"
12월 31일	80억 횡령했는데 오히려 특별대우?
2018년	140억원 회수 "김백준이 핵심 역할"
1월 4일	국세청 다스 세무조사 착수
1월 5일	수상한 유산 상속 진짜 주인은 따로?
	정두언 "다스, MB가 만들었다"
1월 8일	해외에서 사라진 120억원 행방 추적
1월 11일	다스 전격 압수수색…핵심인물도 곧 소환
1월 12일	실소유주 규명할 중요 서류 확보
1월 13일	"창업자금 MB가 직접 줬다"
1월 14일	반박은 했지만…여전한 부실수사 논란
1월 15일	다스 소송 수임료 김백준 관여?
	회장이 직원 명의로 가지급?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BBK 주가 조작 사건, 특검의 수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이 다시 돌아온 일이 얽혀 있고 등장인물도 다수이다. 다스 실소유주가 밝혀진다면 도미노처럼 140억원의 실체가 밝혀지고, 김경준 외에 주가조작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밝혀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맥락과 중요 내용들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기사를 모아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 하루의 리포트들이 중요한 팩트들을 다루고 있기는 했지만 파편화된 조각들을 다루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데일리 뉴스의 한계이지만, 1분 30초 나열식 뉴스의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뉴스의 내용보다 형식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과 수사 속보 등 이른바 스트레이트 리포트가 16개였던 반면, 왜 다스 실소유주가 중요한지 시청자들에게 맥락을 짚어주는 해설 리포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 리포트는 2번에 그쳤다. 우리는 좋은 재료들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히 요리하지 못했다.

과감한 혁신 의지가 있는가?

하루 사이 벌어진 일만으로는 리포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취재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반면 오늘 하루의 소식만 전하기에도 버거울 때가 있다. 뉴스를 하루 단위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매일매일의 단편적 기사들에서 맥락을 읽어내고 분석과 종합, 해설을 하는 새로운 뉴스 생산을 고민하면 어떨까? 그 형식이 제작물이든, 기자나 전문가 출연이든 말이다.

최소 몇 주씩 장기간 이어지는 이슈의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업데이트해가며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뉴스데스크>는 검증, 분석, 종합, 해설의 비중을 높이고, 뉴미디어를 활용해 파편화된 기사들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서로 연결시키면 어떨까? 뉴스데스크든, 뉴미디어 매체든 어디에서도 시청자가 현안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말이다.

기존에 이미 생산된 단편적 기사들을 재료로 이용해, 맥락을 설명하고 종합하는 재가공, 기사 재창출이 우리 뉴스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스트레이트 뉴스를 많이 다룬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를 지닌 기사를 생산하는 단위를 만들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질적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같은 뉴스 혁신을 실험하려면 어려운 도전과제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 우리 자신의 실력의 한계이다. 매일 매일의 단발성 리포트에서 맥락을 읽어내고 종합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기사를 창출해내는 일은, 오랜 취재 현장의 경험과 통찰력을 요구한다. 1분 30초 단발성 리포트에 익숙하고 그 이상 벗어난 경험이 없는 다수의 젊은 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둘째, 뉴스 시간의 한계이다. 40분 남짓한 <뉴스데스크>의 편성 시간과 형식에서 이같은 실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뉴스를 과감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실력이 설사 된다 해도, 40여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호흡 긴 해설과 분석을 담기 위해서는, 그날 어떤 스트레이트 뉴스들을 버릴 것인지 선택에 대한 강한 압력에 직면해야 한다. JTBC가 1시간 30분짜리 와이드 편성을 통해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고 시청자들을 끌어들인 점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뉴스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실력이 숙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기다릴 수 있는 뉴스 책임자들의 여유와 계획, 그리고 뉴스 시간대와 길이에 대한 전례없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실시간 모바일 뉴스 시대에 이브닝 뉴스 부활이 한정된 인력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 보도부문 상황은 불행히도 여유도, 과감한 전환을 고민할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하루하루 뉴스를 메우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우리 뉴스는 두 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 과거 7년 방송 장악의 시간 동안 빼앗겼던 시간으로 인한 우리 스스로의 실력 부족, 그리고 하던대로 하려는 경향, 즉 관성과의 싸움이다.

최근 보도부문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의 인력 부족은 현재 심각하다. 그러나 이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부족한 인력 상황을 뉴스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인력이 예전처럼 충분하다면 우리는 뉴스를 바꿔야 할 필요 압력도 덜 느낄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사발령은 매우 실망스럽다. 단지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칙 없는 인사발령이 단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2일 총파업 과정에서 우리는 원칙을 세웠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권력의 방송 장악에 협력하고 편파 왜곡 보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들이 다시는 저널리스트로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은 철저한 진상조사이고, <MBC 정상화위원회>가 그래서 출범했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어기면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현장 기자들의 탄식은 '어떤 뉴스를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더 추락할 곳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 실패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보다 과감한 혁신을 실험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뉴스에서 한 걸음 떨어져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이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유가 필요하다. 어쨌든, 해답을 찾을 기회는 주어졌다.

지역MBC 사장 공모 시작

노사 동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기 중 '중간평가제' 도입

지역MBC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회사는 최근 16개 지역사의 임원(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지역MBC의 최대주주인 MBC를 대표해 사장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역사 사장을 낙점했던 종전의 관행을 과감히 혁파했다.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받아 노사가 공동으로 2배수 후보를 추천한다. 임기 중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제'도 도입됐다.

임원추천위원회가 2배수 후보 추천

노동조합은 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역사 임원 선임 방안에 이달 초 합의했다. 노사 동수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가 2배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대 주주를 대표하는 MBC 사장이 내정자를 최종 선임하도록 했다.

선임된 지역사 사장은 취임 후 2개월 안에 사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임기 중 해당 지역사 사원의 과반수가 발의하면 중간평가를 받는다. 선임 뒤 18개월 이후 열리는 첫번째 정기주총 2개월 전부터 사원들의 중간평가 발의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사 직원 2/3 이상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MBC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평가 결과를 존중해 지역사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했다.

회사는 최근 방송문화진흥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선임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6일 지역MBC 사장 후보 공모에 착수했다. 지원 자격은 MBC 본 · 관계사 20년 이상 경력자이며, 접수는 오늘 마감된다. 노사 동수 6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2배수 후보를 확정해 사장에게 추천하고, 사장은 면접을 거쳐 24일 최종 내정자를 결정한다.

지난 7년 방송장악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지역MBC 사장 자리는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서고 정권에 부역한 인사들이 전리품처럼 나눠 챙겼다. 그 결과 지역MBC의 공공성과 제작자율성, 지역 시청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됐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로 바꾼 지역MBC 사장 선임 방식을 진일보한 개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말 서울 사장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MBC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 역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은 물론 지역 방송제작 종사자들과 지역 시청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지역사 적폐 사장들 절반 가까이 '건재'

그러나 이번 선임 절차에서 금주에 새 사장이 나오는 곳은 16개 지역사 중 10곳(강원영동, 광주, 대구, 대전,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춘천, 충북)뿐이다. 전임 사장이 주총을 통해 해임됐거나 스스로 물러난 지역사들이다.

나머지 6곳의 적폐 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MBC 재건의 발목을 잡고 있다. <PD수첩> 파괴의 주역인 목포MBC 김현종 사장, 김기춘과 고영주에게 접대골프를 제공한 부산MBC 허연회 사장을 비롯해 경남 김일곤, 안동 안택호, 포항 오정우, 제주 최재혁 사장 등이 남아 있다.

이들 지역사의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총을 열어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사에서는 벌써 주총소집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임시주총 개최를 결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4개 지역사(부산, 경남, 안동, 포항) 이사회에서 모두 주총 소집 결의가 부결됐다. 이미 해임된 최기화가 지역사 이사 자격으로 적폐 사장과 결탁해 저항한 것이다.

김장겸 체제에서 차지한 이들 지역사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최기화가 아직도 앉아 있는 것이다. 새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에도 서울의 '무보직' 이사 자리를 지키며 급여만 축내다가 결국 쫓겨난 최기화가 지역MBC 비상임이사직은 유지하며 이사회까지 나가 몽니를 부린 것이다.

적폐 사장들이 남아 있는 곳은 아직도 보도, 편성제작 등에서 부분적 제작거부가 진행되며 방송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회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김장겸의 잔당들을 청산하고, 각 지역MBC의 정상화를 이끌 새 경영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7년 만에 복원한 '국장 정책발표회' 지면 중계

지난 시절, MBC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있었다. 회사 안팎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장에게 있고, 경영진은 그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하 '국장책임제')이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모든 보직국장은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국 운영에 관한 정책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정책발표회에서 보직국장이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 거침없이 묻고 따졌다. 하지만 2011년 10월 김재철 체제에서 국장책임제는 폐기됐다. 책임과 권한을 빼앗긴 국장의 정책발표회는 유명무실해졌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2018년 1월 국장 정책발표회가 다시 부활했다. 노사가 아직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우선 제작부문부터 본부장(국장급)들과 소속 구성원들이 협의해 정책발표회를 개최한 것이다. 예능본부와 드라마본부 본부장 정책발표회를 지면으로 전한다.

예능본부

지난 8일 M라운지에서 진행된 예능본부장 정책발표회에서 권석 본부장은 "다시, MBC 예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 본부장은 '자율성', '시즌제', '소통'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동안 제작 자율성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에 책임을 느끼며 다른 방송사 예능조직보다 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국장 책임제는 곧 PD 책임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요즘 예능 콘텐츠 제작의 경향인 '시즌제'는 봄 개편에 맞춰 신설되는 프로그램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시즌제 제작이 실험적 형식 도입, 연출 기회 확대, 제작진 휴식 보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새 프로그램 기획안을 수시로 모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예능본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소통이 원활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후, 일선 PD들이 예능본부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 기획안 선정과정에 보직부장뿐 아니라 일선 PD들도 참여했으며, 곧 있을 보직부장 워크숍에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본부

지난 15일 드라마 대본연습실에서는 최원석 드라마본부장 정책발표회(사진)가 열렸다. 이날 정책발표회는 드라마본부 구성원들에게서 미리 질문지를 받아 최 본부장이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드라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비를 현실화하고, 드라마 라인업을 조기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최 본부장은 "회사는 제작비 상승의 배경을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작품별 특수성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다. 또한 연출자와 드라마 라인업을 최소 6개월 전에 확정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본사 자체 제작은 드라마본부의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고 밝힌 최 본부장은 기획개발 예산을 확보해 자체제작을 활성화하고, 극본 공모제를 통해 좋은 작가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과거 본부장들이 행사하던 '권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주 기획안을 선정하는 외주 심사위원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연기자 캐스팅에서 부장과 연출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드라마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타방송사들과 방송분량을 줄이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년만에 열린 예능본부·드라마본부 본부장 정책발표회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준비와 진행에서 미흡한 점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과 구성원들이 MBC를 복원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후에도 국장·본부장들의 정책발표회가 이어진다. 시사교양본부는 오는 25일, 편성국과 보도국은 29일 진행될 예정이다.